野 '현역 20% 공천 배제' 시행세칙 '제동'

선출직 평가위, 의정활동·공약이행 등 기준 최고위에 보고
비주류 "세부 배점기준 제시해야…평가위 위임 안돼" 반발
청년위, 청년 비례대표 기준 '35세→45세 이하' 상향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비주류 측에서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조은 평가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보고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중 의정활동 평가기준일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8일로 정했다.

평가위는 '의정활동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입법 성과와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공약이행 평가를, '선거기여도'는 비례대표 득표율과 기초의원 선거 결과, 기초의원 당선율(당선수)을 각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활동'에 관해서는 조직실적, 운영실적, 민생복지활동 등을, '다면평가'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를, '여론조사'엔 인지도층 내 지지도 후보 및 정당 지지도를 각각 포함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를 신청하더라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평가위는 대강의 기준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요소,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밝혀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부적인 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위에 위임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며 "평가위가 지난 15일간 아무것도 진일보한 세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일단 현재 시행세칙을 통과시킨 뒤 평가위가 일정 시점까지 세부사항을 다시 최고위에 제시하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하고, 의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시키자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손 봐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 점수배당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며 "아마 부대조항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한 뒤 이날 최고위에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출범 시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35세 이하 남녀 비례대표 후보 1명씩을 당선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불과 4년 만에 청년 비례대표제의 취지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운영위에서는 청년 비례대표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35세 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된 후 45세 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기준을 당헌상 청년인 45세 이하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행동 "문·안 화합하길" 새정치민주연합 중립성향 중진급 8인의 모임 '통합행동' 간사인 민병두(가운데)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화합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도 엄단" vs "국민에 폭력"

여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대응 놓고 충돌

16일 여야는 지난 주말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수위를 각각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규정, '시위대 횃불과 경찰 물대포의 대치 상황'을 여의도로 옮겨왔다.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집회를 '불법 정치 집회'라고 비판하면서 엄단을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대응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이노근 의원), "'광우병 시위' 연상"(김종훈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 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하태경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규정을 어긴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며 "정부는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 가격폭락을 호소하는 국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 벽으로 둘러싸고 시민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차 벽으로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TK 지지층 '흔들'

선거개입 논란 여파…대구·경북서 13%P 떨어져

대구·경북(TK)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의 유권자 261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자동응답 병행 방식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1.9%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6%로 전주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57.5%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주(70.5%)보다 13.0%포인트나 하락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박 대통령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8.2%포인트(55.2%→47.0%) 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어떤 악재에도 견고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TK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 고(故) 유수호 전 의원 빈소에 청와대가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진 점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광주서 '사퇴·선대위 구성' 중대발표 할까

내일 조선대서 특강

1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퇴 등 자신의 거취는 물론 통합 선대위 구성 등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의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문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16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말 전후로 연기했다.

성명을 주도한 김동철 의원은 "당초 오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4일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사건에 대한 당의 총력 대응이 필요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면서 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집요한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이날 광주 방문에서 대표직 사퇴 등의 결단에 나설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오히려 문 대표가 이날 광주 방문에서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지만 무책임한 사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명분으로 '사퇴론'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 등의 결단 없이는 문 대표에 대한 냉랭한 호남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혁신공천 시스템이 확립되는 특정 시기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와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밝히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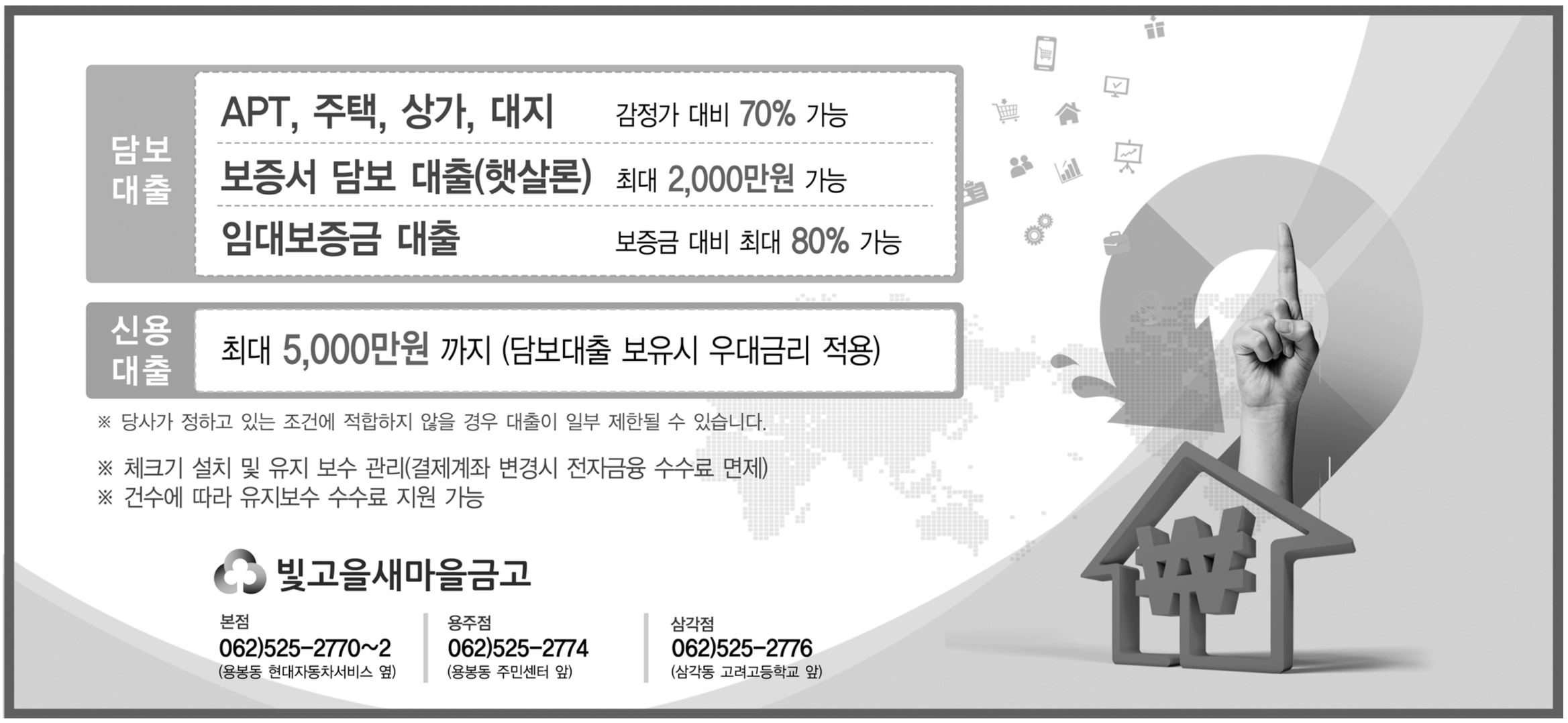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가면 혁신공천안도 공직자 평가위 운영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문 대표의 구상이 광주 방문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주선 "이달말 통합신당 추진위 출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16일 "이달 말 통합신당추진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한 원탁회의 제안에 대한 답을 기다리다가 (답이) 오지 않으면 추진위 체제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전직 의원, 전작 관료, 학·언론·문화·법조·체육계 인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접촉 통해 동의를 받고 있다"며 "이때 참여할 분 명단 일부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탁회의 제안에 대한 반응에 대해 "천정배 의원 측은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 측은 (시간이 촉박하니) 우리라도 먼저 (통합을) 선언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일부만 보다는 모두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 신당을 만들고 나서 통합하는 것보다는 신당 추진단계서부터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